

IBKS Spot Comment

자동차/2차전지

이현욱

02) 6915-5659

hwle1125@ibks.com

[자동차/2차전지]

독일 총선 중도 보수의 승리, EV 영향은 제한적

CDU/CSU – SPD 대연정 전망, 빠르면 4월 말 정부 구성 기대

2025년 2월 23일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CDU/CSU(기민기사 연합)이 28.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극우 정당인 AfD(대안당)는 20.8%의 득표율로 2위, SPD(사회민주당은)은 16.4%로 3위, Grüne(녹색당)은 11.6%로 4위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 결과 CDU 대표인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가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고 있으며 정부 구성까지 평균적으로 두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시 4월말 구체적인 정부 구성이 기대된다. 기민기사 연합(208석)과 사민당(120석)은 합계 328석으로 재적 절반(315석)을 넘겨 대연정을 통한 정부 구성이 전망된다.

기민기사, 사민당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 중립 찬성 정당

독일은 다당제 구조로 단독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운데, 독일의 연방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연정 구성은 필수적이다. CDU는 EU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우려가 존재했으나 사민당과의 연정이 불가피해 EV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발의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민기사 연합을 비롯한 주류 정당들은 극우인 대안당과는 연정하지 않을 것으로 선언한 바 있어 내연기관으로의 회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 독일 내 가장 큰 화두는 경제 및 이민 문제인 만큼, EV 산업에 대한 정책보다 독일의 경기 부양 정책이 선제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는 완화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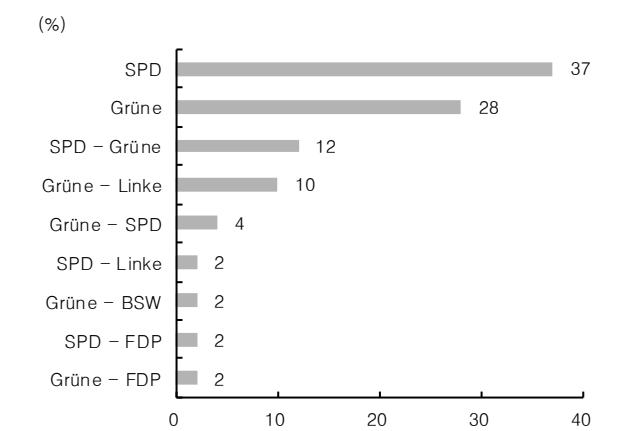
독일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필수적이다. 23년 12월 독일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바 있고, 부채 브레이크 조항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2024년 9월 세액 공제 형태로 EV 보조금 정책을 부활시켰으며, 업무용 전기차를 구입하는 기업에 특별 감가상각 공제 혜택 제공 등 지원을 재개하였으나, 실질적인 독일 전기차 판매량은 4Q23 18.8만 대에서, 1Q24 12.5만대, 2Q24 14.6만대, 3Q24 13.5만대, 4Q24 16.2만대로 분기기준 4Q23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전기차 보조금 부활은 EV 수요 반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 부채 브레이크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GDP의 0.35% 이내로 제한 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수정하려면 연방상원과 하원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완화를 지지, 기민기사 연합과 자민당은 완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경기 부양 정책 필요성으로 소폭 완화 가능성이 존재한다. 독일은 유럽 완성차 판매량 282만대로 점유율 1위(21.7%), 전기차 판매량 57만대로 점유율 1위(19.4%)이다.

표 1. 독일 주요 정당 현황

정당명	성향	노선	총리후보	지지율	의석수	상징색
CDU/CSU(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중도우파	경제성장과 친기업 중시	프리드리히 메르츠	28.5%	208	흑색
AfD(독일을 위한 대안)	극우	강력한 반이민 정책	알리스 바이델	20.8%	152	청색
SPD(사회민주당)	중도좌파	분배와 복지 중시	올라프 솔츠(현총리)	16.4%	120	적색
Grüne(녹색당)	좌파	친환경 에너지 정책	로베르트 하베크	11.6%	85	녹색
Die Linke(좌파당)	좌파	민주주의 반자본주의	헤이디 리치네	8.8%	64	적색
SSW(남술레스비히)	중도	사회자유주의	스테판 세드러	0.2%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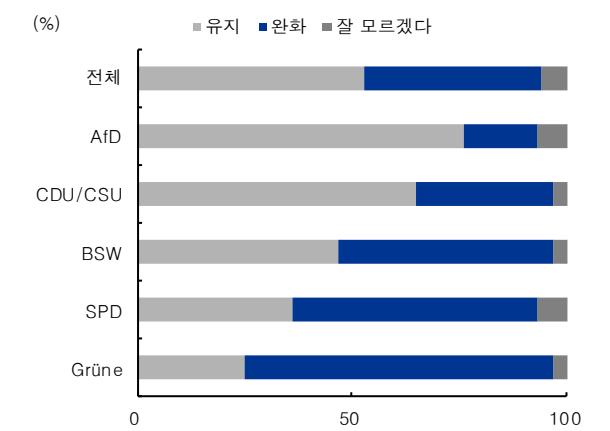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IBK투자증권

그림 1. 독일 선거 후 연합 별 CDU/CSU와 연정 확률



자료: INWT, IBK투자증권

그림 2. 부채 브레이크 정책 선호도 조사



자료: ARD, Infratest Dimap, IBK투자증권

표 2. 독일 정당 별 정책기조

정당	부채 브레이크	전기차 정책	세금 정책	에너지 정책
CDU/CSU	- 부채 브레이크 유지 및 재정 건전성 강조	-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제공 -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반대하며, 협성연료(e-Fuels) 등 대안 기술 지원	- 법인세 인하 및 세제 간소화 추진	-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나, 에너지 안보를 위해 기존 에너지원도 활용 - 핵에너지 재검토 가능성 언급
SPD	- 유연한 부채 브레이크 적용으로 투자 확대 모색	-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 및 보조금 재도입 검토 - 전기차 리스 업체에 대한 할당제 도입 제안 - 전기차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 중저소득층 대상 세제 혜택 강화 -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검토	-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주력 -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녹색당	- 부채 브레이크 재검토를 통해 기후 및 사회적 투자 확대 주장	- 전기차 구매자에 1,000유로 충전 크레딧 제공 -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리스 모델 도입 검토 - 전기차 배터리 상태 점검 지원금 제공	- 부유세 도입 및 상속세 강화 추진 - 환경 친화적 투자에 세제 혜택	-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 및 화석연료 사용 중단 촉구 -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중심의 정책 추진
AfD	- 부채 브레이크 준수 및 재정 지출 축소 강조	- 전기차 보조금 및 지원 정책에 반대 - 내연기관차의 지속적인 사용 지지	- 세금 감면 및 세제 간소화 추진 - 환경 관련 세금에 반대	- 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하며, 기존의 석탄 및 원자력 에너지 사용 지지 - 모든 풍력 발전기 철거 주장

자료: 언론보도, IBK투자증권